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임기 5년인 대통령의 레임덕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임기 초 정치사회 개혁으로 지지율을 유지한 후 중·후반에 경제로 떨어지다가 임기 말에 권력형 비리로 급격한 레임덕을 맞는다. 결국 경제가 나아지길 기다리던 국민에 대한 배신의 분노가 분출되는 과정이다.

3월 들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이 예사롭지 않다. 19일 발표된 갤럽 조사의 37%에 이어 22일 리얼미터 34.1%,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34.0%, 24일 데이터리서치 31.4%로 35%선이 무너졌다.

레이믹은 경제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과 대통령 간의 허니문 기간이 각각 다르다. 대체로 정치사회 문제는 임기 초반에 기대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취임 이후 1~2년 초기에 정치사회 개혁에 집중한다. 그만큼 정치사회 문제에 있어 국민과 새 대통령 간의 허니문 기간은 짧다.

반면 경제의 허니문 기간은 길다. 국민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경제가 단기간에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최소 2년 이상은 감내한다. 특히 코로나와 해외 경제 위기 같은 외부 요인이 있거나 정부가 경제 문

레이믹에 다가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열심히 노력할 경우는 2년보다 더 길 수도 있다. 그렇다고 5년 내내 기다리지는 않는다. 5년 임기가 끝나 가면서도 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차기 대권 주자에게 기대를 걸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급격한 권력 누수가 발생한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은 임기 중반 경제로 지지율이 하락한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수행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국정 운영의 동력이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지지율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역대 정부에서 그 방법은 두 가지였다.

먼저 경제 부양책이다. 그러나 과거 부양책들은 그 효과보다는 풀린 돈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 등 부작용이 더 컸다. 또한 각 경제 주체의 부양책에 대한 학습효과로 부양책의 지속 기간도 점점 짧아져 1~2개월로 끝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부양책을 함부로 쓰기도 힘들다. 그래서 경제적 부작용을 피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유지시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정치사회 개혁으로 되돌아간다. 단 정부 초기와 달리 개혁 강도가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는 경제였다. 소득주도·혁신·공정성장과 사회경제 개혁 등에 집중했다. 그러나 경제 정책들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논쟁에만 휩싸였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검찰 개혁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국민 시선을 경제에서 벗어나게 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는 경제 외부 요인으로 경제 성과에 대한 좋은 면책 사유이기도 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정부보다 허니문 기간이 길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도 경제를 아주 벗어 날수는 없다. 정권 초기 경제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무능, 인사에서 '내로남불' 논란, 검찰개혁 등 정권 의제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중도층에 이어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LH가 터졌다. 내부 정보로 투기를 한 사람들 중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등 정책 수혜자이거나 현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적당하다. 문제는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층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데이터리서치 24일 조사에 의하면 현 정부의 코로나 대책 신뢰도는 53.2%다. 작년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 지지율은 정부의 코로나 대책 신뢰도와 동조 현상을 보였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동조 현상이 깨졌다. 정부의 코로나 대책 신뢰도가 나름 높은 데도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인 31.4%까지 하락했다. 바로 이처럼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은 다음 아닌 23.8%에 불과한 부동산 정책 신뢰도 때문이다. 결국 이번 LH사건이 그렇지 않아도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오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파탄 내게 하고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임기 1년 남짓을 남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도 이전 대통령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지 대통령 친인척이나 핵심 권력의 스캔들이 아니라 현 정부의 기강 잡기 실패로 인한 핵심 지지층의 도덕적 해이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진퇴양난이다.

종교칼럼

삶의 전환



임형준
순천 빛보교회 담임목사

가지 원인중 하나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방향성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런 걱정과 불안이 쌓이면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깊은 우울과 무기력으로 빠져들게 된다. 모든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길 갈망하지만 소망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인생을 후회하게 된다. 내 삶과 직업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하루 해가 금방 저물어 서산을 넘어가듯 우리 인생의 여행은 금방 저물어 황혼에 이르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환경은 새로운 삶의 결단과 실천을 가로막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자 앞에 놓인 토끼처럼 현실을 물리치고 이겨낼 엄두가 나지 않고 공포에 질려 식은땀이 나며, 두렵고 숨이 막혀 답답할 때가 많다. 그래서 슬그머니 현실의 눈치를 살피며 새로운 삶을 향한 전환의 결단을 포기하고 그대로 뉘어둔 채 두려움의 횡포 아래 굴복하며 살아간다. 걱정한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되거나, 반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과거에 묶여 꼼짝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동안 세상을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과거에 묶여 꼼짝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현실이라는 무서운 사자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투기의 눈으로 전환의 스위치를 켤 때, 입을 크게 벌린 사자는 걱정과 두려움의 그림자

였다는 것을 깨닫고 멍실멍실 춤을 추는 토끼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성경에는 전환의 스위치를 '춤'으로 켜는 인물이 소개된다. 춤추는 다윗왕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던 날 다윗왕은 너무 기뻐 춤을 춘다. (삼하6:14)' 순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위엄과 품위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모와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춤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은 왕의 체통을 버리고 미친 듯이 춤을 추는 남편 다윗의 모습을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다윗왕은 현실의 권세와 체면의 무거운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다. 마음으로 춤을 추기 시작한 다윗은 진주와 같이 영롱하고 맑은 시를 쓰며 스스로 시인이 된다. 춤을 춘 다윗은 세상에 시편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 무거운 삶의 책임감과 체면을 잠시 벗어 버리고 전환의 스위치를 켜는 것을 실천해 보면 좋겠다. 마음이 춤을 추면 우리의 삶이 시가 된다. 실천이 목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하지 말고 실천은 지금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즉 즐기지 못하면 목표만 남고 삶은 사라진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순간을 흥겹게 춤추기 보자. 춤추듯 일하면 일상이 즐거움으로 회복된다. 코로나를 틈타 파도드는 우울증과 무기력을 춤의 백신으로 물리쳐야 하겠다.

기고

지방대 위기, 지자체와 함께 해결하자



양광열
전남대학교 입학본부장

지방대의 재정 수입 감소로 연결된다. 이로 인해 내실 있는 학습이 어려워 수요일인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결국은 중도 탈락하는 재학생 비율도 높아지면서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면한 지방대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우리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중도 탈락률도 1%로 전국 최저 수준이며 신입생 충원률도 100%를 보인 대학에서 일부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 대학은 1학년 전원 자유전공제를 적용하여 교양 수업과 전공 기초 과목을 수강하며 충분한 전공 탐색 시간을 가진 다음 1학년 성적과 상관없이 2학년 때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복수 전공을 의무화하여 문·이과 간 막이 없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지방대의 위기에 대한 원인을 찾기 보다는 먼저 이 기회에 그동안 실행하였던 대학의 자구 노력에 대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대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는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기에 초심으로 돌아가 대학의 특화된 강점을 중심으로 대학의 공간인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과정을 발굴하고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최상의 알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지방대

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리라 생각한다.

사실 많은 입시 전문가들은 지방대 위기의 출구를 취업률에서 찾고자 한다. 지방대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지역 산업체에 취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역의 발전과 함께 지방대의 위기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대·지자체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 사업이 추진되고 있듯이 이제는 지방대에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정주하게 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지방대에서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차원에서 입학전형 기본계획 설계 시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리는 자구책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 지역과 가까이 있었던 대학이 폐교됨으로써 지역사회 및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경험을 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아니 지역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을 살려야 한다. 인구학자는 다시 한번 말한다.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잘 보고 대학의 미래를 잘 정해 나가는 노력이 대학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면 진정한 '공존'의 지혜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최근 광주시에서 신설기로 한 '대학발전협력단'이 그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社說

드디어 닷 올린 '한전공대' 과제도 만만찮다

지역민들의 숙원인 한전공대특별법이 엇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능해져 자칫 차질을 빚을 뻔했던 한전공대 내년 3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법안 통과에 따라 대학 명칭은 한국전력공과대학에서한국에너지공과대학으로 바뀌고 사립학교 법인도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 조만간 시행령이 공포되면 설립 작업이 본격화된다. 5월 3일까지 입학 전형 발표하고 신입생 선발과 캠퍼스 착공을 거치면 내년 3월 개교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최우선 과제는 학교 부지를 제공한 부영 측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부영 특혜 논란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만큼 전남도와 나주시가 약속한 개발이익의 환수 조치 외에도 과도한 개발이익을 거둬들이는 추가적인 장치마

련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한전공대와 광주·전남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대학인 만큼 인재 양성과 연구 기반을 구축해 한전공대의 성과가 지역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낙수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과학기술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연구개발 기반 구축으로 초강력 레이저센터와 방사광가속기 등 국가 전략시설 유치에 나서 산학연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과학교 등 지역 고교와의 협업 필요성과 신입생 선발 시 최소한의 지역 인재를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국에너지공단 설립추진위원회는 지역 인재 전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혁신도시 정신을 살리고 설립 목적이 유사한 울산과학기술원의 사례를 보아도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대학 설립 기반을 마련한 만큼 추진 과정에서 부영의 특혜 논란을 잠재우고 운영 측면에선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식이법' 1년 됐지만 사고 위험 여전하다

학교 앞 어린이 교통 안전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28건에서 2019년 40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47건으로 증가했다. 민식이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도 41건에 달해 2019년보다 많았다. 광주 지역 스쿨존 내 과속 차량은 지난 2018년 1만 2187건에서 2019년 1만 6980건 그리고 지난해 2만 2754건으로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본보가 지난 25일 일부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한 결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학교 담장 인근에 설치된 폭 50cm 가량의 인도는 전신주나 쓰레기 등

으로 막혀 있는 곳이 많았다. 학교 인근을 지나다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차량들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엇그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도 현재 173대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올해 안으로 106대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무단단속 카메라도 90대에서 134대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책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스스로 방어할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등굣길이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역설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無等鼓

"40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에 저주가 일어난다." 아소 다로 전 일본 부총리의 말이다. 194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한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뒤 개최권을 반납했다. 이후 40년 만인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반발로 한국을 비롯한 62개국이 불참해 '반쪽 대회'로 치러졌다.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간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오는 7월 대회를 치르게 된다. 세 번의 '저주' 받은 올림픽' 중 두 번이 도쿄올림픽이다 보니 일본 내에서 자조 섞인 말이

'반쪽 올림픽'

나온 것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는 지난 20일 일본 외의 관중을 받지 않고, 국내 관중 수도 50%로 제한하는 '반쪽 올림픽'을 지르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림픽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올림픽을 통한 경제 부흥이나 후쿠시마 사고 오염 벗기 등의 목표는 결국 물거품이 됐다.

지난해 3월 그리스에서 채택된 뒤 긴 잠에 빠져 있던 성화는 어제부터 봉송길에 올랐다. 본격적인 올림픽 여정이 시작

되면서, 일본은 코로나 긴급 사태를 전면 해제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올림픽 개막 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선수촌 식탁에 방사능으로 얼룩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강행된다 해도 국가 단위 혹은 선수 개인별 불참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쿠시마 경기장에서 열리는 야구의 경우 미국·유럽 국가대표 선수가 대거 출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올림픽은 열려야 한다.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는 계속되어야 한다. 전쟁과 테러의 위협 속에서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인류의 평화와 친선 그리고 도약을 이루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기 때문이다. 올림픽은 가장 큰 평화 운동이기도 하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되었지 않았던가.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 남북·북미·북일 등 다자 간 대화의 장이 열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의 꽃이 활짝 피었으면 한다. /유재관 편집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